

“노동자 버팀목 근로감독관, 노동자들에 신뢰 못받는다”

회사 ‘갑질’ 신고해도 차일피일 미루고 무성의한 태도 노동자들 노동청보다 상담센터·노무사 더 의지 노동계, 감독관 증원하고 근로감독청 신설 등 요구

갑질 피해를 참다참다 어렵게 노동청을 찾은 노동자들이 근로감독관들의 무성의한 태도에 속상해 하고 있다. 노동조합이 없는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노동자들에게 근로감독관은 회사를 상대로 자신들의 권리를 확보해줄 수 있는 유일한 버팀목인데도 정작 노동자 입장을 배려하지 않은 소극적 조사와 무성의한 태도로 외면받고 있다는 게 노동계 주장이다. 22일 노동전문가들이 모인 단체 ‘직장갑질119’가 전국 공인노무사를 대상으로 ‘2021년 근로감독관 신뢰도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근로감독관들의 신뢰성과 업무 처리 방식에 불만족스러운 것

로 조사됐다. ‘근로감독관이 진정·고소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변한 노무사가 응답 대상자의 66.7%에 달할 정도로 사건 처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공정하다고 응답한 노무사 비율은 고작 6.7%에 그쳤다. 업무 처리의 신속성에 대한 불만도 높았다.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느냐’에 질문에 응답한 노무사의 90%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생계와 직결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노동자들 상당수가 노동청을 찾는 만큼 업무의 신속한 처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게 노동계 시각이다.

하지만 설문조사대라하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근로감독관을 믿을 수 있느냐고 묻는 항목에서도 10명 중 8명(83.4%)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지역 노동 현안을 챙기고 노동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야 할 근로감독관을 믿지 못하니 노동청의 존재 이유가 무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 ‘보통’이라고 응답한 노무사 비율은 13.3% 순, 신뢰한다고 답한 비율은 3.3%에 불과했다. 통계 수치 외에 광주지역에서 현장 노동자들을 만나는 노무사들도 비슷한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102조 제5항)에 따른 노동관계법령 위반 업무를 보는 사법경찰관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경찰관보다는 중개인으로 인식된다는 것이다. 근로감독관이 챙겨야 하는 관련 법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법, 산업안전보건법, 노동조합법 등 무려 16개에 이르지만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노무사들 사이에서는 근로감독관의 불성실한 조사, 녹장 처리, 노동자들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합의나 신고 취하 종용 등에 대한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다. 광주지역 A노무사는 “신고를 하러 간 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이 증거 가지고는 안된다’, ‘법적으로 하면 서로 피해가 있다’, ‘실익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한 노무사는 “노동청에 갑질 신고한 지 2년이 넘도록 여태껏 해결되지 않고 있는 사건도 있다”고 말했다. 노골적으로 회사 편을 들거나 막말을 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했다. 근로감독관들은 현재 업무에 대한 개선 없이 노동자들이 제기하는 불만 민원 등을 해결하기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 사람에게 주어진 일이 너무 많다보니 현장 불시점검은 커녕, 서류상 업무 처리에도 속도를 내기가 힘든 상황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산업재해를 담당하는 산업안전근로감

독의 경우 광주노동청(27명), 여수지청(8명), 목포지청(8명) 등에 불과해 광주 사업장(6만곳), 전남(6만7000곳) 등을 꼼꼼히 살피기란 불가능한 형편이다. 노동자들의 갑질 여부를 살피는 근로개선 근로감독관도 비슷하다는 게 노동계 주장이다. 설문조사에서도 이같은 점 등을 들어 ‘근로감독관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응답자의 36.7%가 ‘근로감독관 증원’이라고 답했다. ‘근로감독관제도 전면 혁신’(31.7%), ‘소극행정, 부적절 발언 등 근로감독관 인사사고과 반영’(18.3%), ‘근로감독관 교육 강화’(8.3%) 등도 있었다. 김광권 민주노동총국주분부 선전국장은 “근로감독관 개선을 위해서는 명예근로감독관 도입부터 근로감독청 신설, 근로감독관 재교육·취우개선방안 마련 등 꾸준히 제기된 개선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한반도 평화공감 캠페인 광주 북구청 광장에서 지난 20일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북구협의회 ‘한반도 평화공감 확산 캠페인’에서 문인 북구청장과 표범식 북구의회의장, 허영호 회장 등 회원들이 홍보현수막을 들고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뇌심혈관질환 직업성 질환에 포함해야” 이철갑 조선대 교수 중대재해법 개선 국회에 호소문

지역대학 교수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개선해야 한다고 국회에 호소문을 보낸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22일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권 실현을 위한 학자전문가 네트워크(준)’에 따르면 이철갑 조선대(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의 위반 여부를 검토해달라는 호소문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법(98조 2)은 ‘상임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상설소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의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안전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기업이나 사업장, 또는 공공기관 책임자를 처벌해 더 이상의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데 따라 제정됐음에도, 시

행령은 이같은 법 취지를 무력화할 수 있는 조항을 담고 있다는 게 이 교수 주장이다. 이 교수는 특히 시행령의 직업성 질환 목록에서 뇌심혈관 질환을 제외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주 52시간 이상 과로를 금지한 근로기준법만이라도 지켜진다면 고령이거나 기저질환이 있더라도 뇌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은 대폭 낮아진다는 게 이 교수 지적이다. 현재의 중대재해처벌법으로는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 건물 붕괴사고’에 대한 책임자 처벌도 힘들다는 점에서 개정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구별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일하다가 다치거나 사망한 피해자는 없는 학동참사는 중대산업재해에 해당되지 않는 상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산구 고교 학교폭력 가해자 2명 ‘퇴학’

광주서부교육지원청 심의위

지난 6월 학교폭력으로 고통을 겪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교생 <광주일보 7월 5일 6면> 과 관련, 가해 학생들에게 퇴학 등 중징계가 내려졌다. 22일 광주서부교육청 등에 따르면 광주서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는 지난 17일 열린 심의위에서 학교폭력을 견디다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 A군을 대상으로 폭력을 휘두른 가해 학생 2명에게 ‘퇴학 처분’ 토록 서부교육청에게 요청했다. 심의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7조)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의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의 조치를 관할 교육청에게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심의위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2명의 학생들을 ‘퇴학 처분’ 조치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위는 다른 가해학생 9명에 대해서도 심의를 거쳐 관련 ‘교육, 선도 및 징계’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들의 경우 범행 가담 정도와 횡수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던 경찰의 수사결과를 감안, 퇴학 요구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서부교육청 관계자는 “담당교육지원청 심의위가 최근 11명의 가해 학생 전원에 대한 ‘선도 및 징계 조치’ 등을 해당 교육지원청 교육청에게 요청했다”면서 “아직 가·피해자측에 해당 내용이 서면으로 통보되지 않은 만큼 퇴학 처분 요청을 받은 학생 외 나머지 학생들에 대한 징계 요청 사항을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광산경찰청은 지난 6월 29일 학교폭력으로 고통받다 극단적 선택을 한 A군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상공동상해 등)를 적용, 또래 학생 11명을 적발해 2명을 구속하는 등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 50대 남성 백신접종 후 사망...진상조사 청와대 청원

광주에서 50대 남성이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20일 만에 숨져 보건국이 인과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피해 가족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진상 조사를 요구했다. 22일 화순군보건소 등에 따르면 모더나 백신을 맞고 급성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은 뒤 20일 만에 숨진 A(55)씨에 대한 진상 조사를 요구하는 유가족이 청와대에 글을 올렸다. A씨 부인은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남편은 50대 예약일정에 따라 광주시 남구 모 병원에 신청을 해 접종을 했는데 접종 후 3일 내내 열이 낮고 병원에서 지어준 해열제를 먹고 버티다가 3일째 되는 날 39.4도의 고열로 인근 병원에 방문해 급성백혈병이 의심되니 큰 병원으로 가라는 진단을 받았다”면서 “남편은 화순전남대병원에 입원해

16일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 숨졌다”고 썼다. A씨는 지난 5월 건강검진 시 백혈구가 정상범 위였는데 백신 접종 후 최초 진단 병원에서 20여배 가 넘는 수치가 나왔다고 했다. A씨 가족은 “문진 시 최근 피곤으로 헛바늘 돌음과 목의 인후통 등 몸살기가 있는데 백신을 맞아도 되는지를 문의했지만 맞아야 된다는 의사 말을 듣고 맞았다”면서 “의사는 영양제도 맞을 것을 권하여 마늘성분 영양제라며 두 봉지의 수액을 처방했다”고 적었다. 부인은 “남편이 아프다고 했는데도 백신과 영양 수액을 맞게 한 의사의 의료행위가 정당했는지 밝히고 싶다”고 적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부동산중개법인 한국토지부동산

강력추천! 투자가치 100% 확신!

다세대빌라

(북구 운암동)

- 대 지 : 364 m²
- 건 물 : 411 m²
- 층 수 : 3층
- 세대수 : 6세대
- 평 형 : 24평형

매매가 : 540,000,000원

상담 010-3733-3933